

##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시행과 정착

손 혁\*  
문 상혁\*\*  
정 재경\*\*\*

2002년 미국에서 발생한 엔론 등 회계부정사건은 회계투명성의 중요성을 정보이용자 및 규제당국에게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 Act, 이하 SOX)법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상장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도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관련 제도는 규모가 크고 다수의 정보이용자를 갖고 있는 상장법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주로 규제 위주의 규정이 중심이 되어 있다. 따라서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계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중심이 아닌 유인책을 주로 제시하여 자발적인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의 의무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관련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경감시킨다. 셋째,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자발적인 도입 등 회계투명성을 일정 기간 확보하는 경우 세무조사면제권을 부여하거나 법인세 감면 및 분납 등 세법상 유인책을 도입한다. 넷째, SOX에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이 많이 퇴색된 몇 가지 제도, 예를 들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및 자수제도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등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규제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신설, 보완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확보를 위해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상장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회계투명성, 중소기업, 유인 제도, 내부고발자

### 1. 서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도입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을 확

인한 후 중소기업에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몇 가지 유인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발생한 엔론 등 회계부정사건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실질적인 의문을 가져왔다. 따라서 미국 의회는 사베인스-옥슬리(Sarbanes-Oxley

논문접수일: 2012. 01. 13. 1차 수정본 접수일: 2012. 03. 16. 게재확정일: 2012. 03. 29.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과 전임강사(succman@mensakorea.org), 제1저자

\*\* 영남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shmoon@ynu.ac.kr), 공동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박사과정(jjung0905@naver.com), 교신저자

Act: 이하 SOX)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SOX는 재무정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까닭으로 회계투명성의 부재가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한 회계부정사건을 교훈삼아 이를 예방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도입 취지는 결국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국가적 할인현상(Korea Discount)을 해소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회계제도선진화 방안은 주로 규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도입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적용을 위해 규제일변도의 정책과는 별도로 다른 형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도의 과도한 규제와 도입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관련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회계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할 때 규제 당국이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해줄 필요가 있으며,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관련 비용을 세액공제한다. 둘째, 중소기업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부담을 경감시킨다. 셋째, 중소기업이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자발적인 도입 등 회계투명성을 일정 기간 확보하는 경우 세무조사면제권을 부여하거나 법인세 감면 및

분납 등 세법상 유인책을 도입한다. 넷째, SOX에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이 많이 퇴색된 몇 가지 제도, 예를 들어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및 자수제도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등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규제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신설, 보완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정착시키고 회계투명성확보를 위해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상장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서론에 이어 II장은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III장은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획일적인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IV장에서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중소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기술하며, V장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 II.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내용 및 관련 선행연구

### 2.1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도입 배경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외형을 중시하는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였으며, 경영자의 윤리의식이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회계정보의 투명성이 반영된 질적 성장이 동반되지 않고는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깨닫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01년 말에 미국에서 일어난

엔론사건에서 비롯된다. 2001년 10월에 회계부정으로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이었던 엔론이 파산신청을 한 후 2002년에는 월드컴, 타이코인터내셔널, 글로벌크로싱, 아텔피아 등 대기업의 회계부정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세계 5대 회계법인 중 가장 규모가 컸던 아더 앤더슨(Arthur Andersen)은 파산한 에너지기업 엔론의 회계부정사건에 휘말려 분할 매각되었으며, 관련 대기업들도 연속적으로 도산하였다. 이에 미국 정부는 회계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업 규제에 나섰다. 기업의 회계부정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2002년 7월 기업회계개혁법을 제정하였는데, SOX로 불리는 미국의 기업회계개혁법은 회계부정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1)</sup>

## 2.2 우리나라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미국의 SOX 처럼 특별법으로 신규 제정하지 않고 기존 법률인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 및 증권거래법(추후 '자본시장법'으로 변경됨), 공인회계사법에서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미국과 다르나, 내용에 있어서는 SOX의 많은 부분을 응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일련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2.1 공개기업 회계정보 공시 강화

공개기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sup>2)</sup>은 매출채권, 자산교환거래, 시장성 없는 지분형증권 등 자의적 회계

처리의 위험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그 구성 및 평가내역 등을 상세히 공시하여야 하며 대주주·임원·특수관계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 2.2.2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일부 경영자문업무 동시수행 금지

감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특정기업과 감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는 감사업무외에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재무정보체계의 구축 또는 운영 등 당해 기업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동시에 병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2.2.3 회계부정행위 및 불공정 증권거래행위 내부고발자보호

미국 회계부정 사건 등을 통해 엔론 등 문제기업의 회계부정은 내부고발자가 없었으면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며 내부고발자의 보호는 회계투명성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회계분식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사인이나 감독당국 차원의 적발 노력 외에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해 이들이 허위사실을 공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2004년 외감법을 개정하여 회사의 회계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당해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회사는 신고 또는 고지한 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영투명성 확보와 분식회

1) SOX의 주요내용으로는 회사 경영진의 재무제표에 대한 인증 및 책임 강화, 내부통제시스템의 강화,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설치 및 운용,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 각각 순서대로 유가증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의미한다. 당시 제정하였을 때의 원문으로 표기하였다.

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 2.2.4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의 인증의무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히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의 진실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에서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담당임원(CFO)은 사업보고서를 확인·검토한 후 허위기재나 기재누락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서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보고서 등 신고서류에 추후 부실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고경영자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 2.2.5 공시서류허위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의 민사책임 부과

사실상 업무지시자란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등기임원 뿐만 아니라 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상법에 의하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거 증권거래법상 민사책임 부과 대상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업무지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이를 악용해 등재이사가 아니면서 회장이나 명예회장 또는 대주주 등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시서류를 허위기재토록 하거나 분식회계 등에 관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고자 상법상 배상책임규정과는 별도로 증권거래법에 관련근거를 신설하여 업무집행 지시자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2.2.6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포함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의 완전성, 외부감사인의 자격요건 및 독립성, 회사의 내부감사기능 등을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과거 감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분야의 전문지식(경력 5년 이상)을 가진 자로 정하였다.

#### 2.2.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할 당시 법제화되었고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과 동시에 감사인의 검토의견 표명을 의무화하였다. 추가적으로 2004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담당임원(CFO)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평가와 효율적 운영사실의 인증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검증방법, 회계관련 임·직원의 업무분장 등을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하고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하였다.

#### 2.2.8 동일 감사인 6개 사업연도 초과 감사 금지

동일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장기감사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여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의 유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sup>3)</sup> 2006년 이전에는 회계법인 내부의 감사 담당 이사를 상장·등록기업의 경우 4개 사업연도 초과시, 비상장·비등록기업은 6개 사업연도 초과시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하고 감사업무 보조자의 3분의 2를 3년마다 바꾸도록 했을 뿐 회계법인의 주기적 교체는 의무화하지 않고 있었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책임강화를 목적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기업은 원칙적으로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sup>4)</sup>

### 2.2.9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우리나라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도입하도록 하였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 간 자본이동이 활발해지고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 재무제표가 개별 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바뀌므로써 특히 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내부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질을 보다 정확히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3 선행연구

회계제도 관련 법령의 변화가 개별 기업가치나 시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한 최근 연구는 2003년 미국의 SOX 도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다. SOX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건연구이거나, SOX 404조에 해당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가치 및 자본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SOX 도입 후 경영자 및 감사인의 책임의 증가로 인해 이익조정 의 크기나 형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Zhang(2007)은 SOX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이 법안의 입법시점에서 시장반응을 조사하였다. 미국기업의 경우 SOX 사건의 누적초과수익률은 유의하게 부정적으로 보고되었고 이러한 부정적 반응은 비감사업무 등에 따른 순비용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Ogneva et al.(2007)은 SOX에서 공시하도록 한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과 자본비용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자본비용을 가진 기업일수록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을 가졌음을 보였으나, 회사의 고유한 특성 및 재무분석가의 예측오차를 통제 한 후에는 자본비용과 내부통제제도와 의 관련성이 낮아졌음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SOX의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의 공시가 시장의 부정적 반응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투명성이 개선될 것을 기대하고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연구도 있다.(Park 2008)

Ashbaugh et al.(2008)은 SOX도입으로 인해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과 발생액에 대한 품질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폈다. 내부통제제도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회사일수록 비정상적 발생액이 커짐을 확인하였다. Cohen et al.(2008)에 의하면, SOX 전후 이익조정 의 형태가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에서 실제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실증하였는데 그 이유는 SOX 이전에는 경영자보상이 주로 주식선택권과 같은 지분보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비교적 최근

3) SK글로벌의 경우 동일회계법인이 10년 이상 감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이 분식회계를 방조하였다는 의견이 있다.  
4) 단,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모회사와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불가피한 경우(연속적인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등)나 유가증권이 회계투명성이 보장되는 기업에 한하여 상장을 허용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뉴욕·런던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감사인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 끝에 감사인교체제도는 2009년 2월 3일 폐지되었다.

에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SOX관련 연구처럼 특정 시점을 전후로 관련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이렇다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신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세부항목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다. 또한 회계정보 유용성의 추세를 전반적으로 확인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특정 제도의 도입이 이익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다.

권수영 등(2004)은 감사대상회사에 비감사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는지를 수정된 Jones 모형(1995)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세무조정을 제외한 비감사업무와 감사업무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재량적 발생액은 음(-)의 부호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의 동시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뜻한다. 이에 비해 정대길 등(2009)은 비감사업무의 보수 자체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기감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공인회계사법 상 금지된 비감사업무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비감사업무의 유형에 따라 감사인의 독립성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고 현행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의 동시수행 금지규정이 타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감사인 지정제도의 시장반응효과를 본 이세용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인 지정기업의 지정일을 기준으로 누적초과수익률은 유의적인 양(+)의 값을 보였으며 감사인 지정이후 이익반응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참여자들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교 등(2009)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취약점과 발생액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

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하지 않은 기업보다 발생액의 질이 낮지만 차후에 취약점을 개선한 회사는 개선하지 않은 회사보다 발생액의 질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공시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기업의 회계품질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국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세부 항목들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시장참여자들도 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원선 등(2003)은 1980년대부터 20년간 회계정보 유용성의 변화 추세를 가치관련성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자산으로 인식된 연구개발비의 가치관련성은 감소하지만 비용처리된 연구개발비의 가치관련성은 증가함을 보임으로써, 향후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원칙의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백원선과 유재권(2010)은 2004년과 2005년을 전후하여 시행된 회계제도방안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보수성을 증가시키고 비영업발생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이익품질이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미국의 SOX나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도입은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SOX 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제도가 기업에 부담을 과중시키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따라서 SOX 등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도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뿐 아니라 비상장기업 및 중소기업에서도 관련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상장기업에 비해 비상장 중소기업은 규모

가 작고 수익성이 낮으므로 관련 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지배구조가 집중되어 있고 외부정보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관련 제도의 도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문제에 사회적 인식은 매우 높으나 자료수집 등의 어려움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실증연구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고 진행된 대다수의 연구들도 회계담당자, 공인회계 및 세무사,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권순기 2001; 김남희 2003; 김동관 2004).

권순기(2001)는 회계담당자, 금융기관 및 신용조사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회계정보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산과 경남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계투명성을 살펴본 변상진(2002)은 표본기업 중 약 56%가 분식회계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동관(2004)은 대상기업의 과반수가 회사의 정책방향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중소기업의 회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중소기업이 이익조정을 하는 주요한 동기는 세금절약과 금융기관 대출에 있음을 보고하였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상의 연구들과 달리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정도를 대기업과 비교 분석한 심상규(2007)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이익조정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음을 밝히고, 지배구조 및 외부감사여부가 이익조정 효과적

인 억제수단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김광운과 심충진(2011)은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르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재무제표 검토(review)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국내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투명성의 수준이 낮다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장기업의 접근방식과는 다른 도입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획일적인 도입이 중소기업에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정착을 위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I.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

#### 3.1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의 가중

SOX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도입 취지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자본비용 등 거래비용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는 주로 규제의 형태이므로 이를 실행하려면 비용이 발생한다.<sup>5)</sup> 실제로 미국의 회계감사원(GAO)은 기업 재정의 건전성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관계 당국에 회계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된 SOX가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 제정 이후 관련 회계감사 비용 부담은 연 30~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5) 예를 들어 감사인강제교체제도를 실행하는 경우, 관련제도를 적용받는 회사는 6년마다 감사인을 새로 교체해야 한다. 이 때 탐색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서도 전환비용, 해석비용 등 관련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나타났다. 그 이유는 SOX에서 요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운영보고서 및 강화된 회계 보고서를 산출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규제는 제도 자체의 효익보다는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sup>6)</sup>

### 3.2 규제일변도의 정책

현재 회계부정에 대한 수요와 공급곡선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가하는 규제가 만일 균형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회계부정에 대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이라면 균형가격 이하로 제한해야 의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규제가 성공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회계부정의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회계부정을 수요하는 자는 암시장에서 보다 높은 가격으로도 회계부정을 구매할 용의가 있으므로 회계부정으로 인한 공급자의 수입은 크게 줄지 않는다. 따라서 규제로 인한 회계부정의 제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벗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게 하는 유인이 필요할 것이다.

### 3.3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수요자 간 차이

만일 SOX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수요자가 동질적이라면, 수요자 측면에서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데 따르는 비용 문제는 균등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개별 기업의 규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적용 받는데 따른 비용이 다르다. 특히 이러한 비용은 규모가 작은 기업 입장에서 더 큰 부담을 가질 수 있다.<sup>7)</sup>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에 따른 평균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정보이용자의 수가 적고 지배구조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회계투명성에 대한 외부정보이용자의 수요가 적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동일한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으며, 기업의 특성에 맞게 관련 제도의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함을 암시한다.

## IV.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제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상장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지배구조가 집중되어 있으며 회계투명성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수요도 더 작으므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회계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할 때 규제 당국이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해줄 필요가 있으며,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관련 방안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6) GAO는 SOX에 따른 비용이 크게 늘자 이를 줄이기 위해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SOX가 제정되기 전인 2001년 상장을 철회한 기업수는 143개였으나 2004년에는 245개 기업이 상장을 철회, 3년 만에 그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더욱이 미국 벤처기업들이 이러한 비용부담을 피해 뉴욕 증시를 떠나 런던 증시에 상장(IPO)하는 사례가 크게 늘게 되어 자금이 미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동하여 실제로 런던 증시가 뉴욕 증시의 상장건수를 앞지르게 되었다(2007. 12. 12 미국 상공회의소 보도자료).

7) 회계감사원(GAO)의 2006년 보고서에 의하면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은 매출 100 달러 당 감사비용으로 0.13 달러를 투입하는 반면, 시가총액 7,5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은 1.14 달러를 사용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부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GAO는 특히 시가총액이 7억 달러가 안 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SOX를 지키기 위한 각종 비용이 규모에 비해 지나친다고 주장하며 특히, 기업 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회계 관련 비용 때문에 일반 투자나 인력 채용을 하지 못할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4.1 중소기업의 외부감사비용의 부담 경감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거나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인 외부감사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서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적 재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경우, 관련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sup>8)</sup> 그 이유는 자발적인 외부감사가 사적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공공재적 역할을 일부 수행하며 사회의 총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등 세금을 절감하는 방식,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을 대출할 경우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식, 감사비용의 직접지원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배구조가 집중되어 있을수록 세금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높다(Desai et al. 2004).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지배구조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액공제 등의 유인책으로 외부감사 비용을 경감한다면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sup>9)</sup>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부분의 자금조달을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을 통하여 조달하고 있다. 외부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여하여 정보위험을 감소시키는 보험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외부감사의 인증은 중소기업의 타인자본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오광욱 등 2011). 따라서 중소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과 같은 정책기관이 대출시 금리인하 등의 유인책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sup>10)</sup>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과 유사하게 가격보조 방식으로 감사비용의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부담한다면 중소기업이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부담은 많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특히 이러한 직접지원은 소형회계법인 등의 외부감사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과 소형회계법인의 자생력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2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부담 경감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의무도입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상장기업은 이를 도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의 목적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규제

8) 정책당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개정하여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를 직전연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7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이 부분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외부감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ex: 회계투명성의 저해)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외부감사가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외부감사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실무투자 등에 사용할 투자자금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감사대상회사의 범위를 축소시켜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외부감사대상의 축소를 해결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외부감사비용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9) 그러나 세액공제는 이월공제를 하더라도 결손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입장에서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10) 실제로 비상장기업의 타인자본조달방식의 대부분은 담보차입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책기관부터 담보대출을 줄이고 정확한 신용평가 및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시스템의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물론 가격보조와 같은 직접지원의 경우 재원마련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의 지원의 일부를 대체하여 적용하는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국이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약정한 부분이므로 기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용을 들여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특정 기업은 연결대상의 경우, 또는 정보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이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부담은 상장기업에 비해 클 것이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중소기업의 재무정보체제 구축 등 국제회계기준 초기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회계인력은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sup>12)</sup>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현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회계처리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회계정보산출에 대한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세법과 차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4.3 일정 기간 회계투명성의 확보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중소기업이 회계투명성을 일정 기간 확보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도입한다. 회계투명성의 확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지속적인 적용 또는 계속감사계약체결로 인해 독립성이 확보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및 분납 등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규제당국이 회계투명성 지속에 대

한 포상 등 유인책을 도입함으로써 이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 4.4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강화

본 연구는 SOX에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이 많이 퇴색된 몇 가지 제도가 있다. 특히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및 자수제도 강화, 내부고발자 보호규정 등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규제 당국이 관련 제도를 신설,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들어 규제당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의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회 풍토상 정착되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부고발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내부신고에 대한 아웃소싱을 유도하는 제도를 만든다. 내부고발자가 만일 내부조직기관에 부정이나 비리를 신고하는 경우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보장되지 않으며 내부고발 자체가 묵인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최근 상당수의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내부고발시스템을 외부로 위탁하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조직내 구성원이 비교적 소수이므로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파악되기 쉽다. 즉 중소기업 내에서 내부고발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고발자의 신변보장과 신고기관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내부고발 아웃소싱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시행할 때 정책당국이 관련 비용을 일부 부담하거나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거나 내부고발에 따른 경제적 보

12) 중소기업학회가 국내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위해 527개 법인과 101개 개인 기업을 합친 총 6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규모별 회계(경리) 담당 인력은 1명을 보유한 경우가 4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명을 보유한 경우가 32.5%를 차지했다. 회계 담당 인력이 전무한 경우는 1.6%로 자산규모가 20억~50억 미만인 경우 0.7%, 5억 이상~20억 미만인 경우 3.2%, 5억 미만 기업은 7.7%로 자산 규모가 적을 수록 회계 인력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하략) (뉴스토마토 2011. 09. 19)

상장치를 제도화한다. 내부고발자는 내부고발에 따른 보상이 없다면 자신의 조직의 부정이나 비리를 자백함으로써 얻는 비효용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내부고발자 제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비효용을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즉 규제당국은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보상장치를 마련하여 관련제도를 통한 회계투명성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도입으로 인해 중소기업 측면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를 제시하여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편익을 높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이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에 힘입어 국가청렴도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등의 순위가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상승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sup>13)</sup> 하지만 아직으로 발생하는 회계부정사건은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과 같은 제도 개선의 노력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은 기업의 유동성을 높이고 자본비용을 감소시켜 결국 한국에 대한 국가적 할인 현상을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이용자의 확고부동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과 개혁뿐만 아니라 정보를 산출하는 경영자와 감사인 및 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의

책임과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중소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감사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등 세금을 절감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배구조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세액공제 등의 유인책으로 외부감사 비용을 경감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초기 도입비용을 세제혜택을 통해 일부 경감한다. 국제회계기준의 설치비용(Set-Up Cost)는 상장기업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비용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거나 세무조사 면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율회계처리를 마련하여 회계정보 및 조세산출비용을 경감할 필요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이 회계투명성을 일정 기간 확보하는 경우 세무조사면제권을 부여하거나 법인세 감면 및 분납 등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규제당국이 회계투명성 지속에 대한 포상 등 유인책을 도입한다.

넷째, 회계투명성 확보 및 사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규정을 강화하여 관련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완화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제도와 법안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은 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고 상장기업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따라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중소기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13) 프라이스 워터하우스(Price Waterhouse)와 밀켄 인스티튜트(Milken Institute)가 개발한 불투명성 지수(Opacity Index)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48개국 중 22위로 꾸준히 불투명성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세부항목인 '회계기준 및 기업지배구조' 지표는 계속 30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2010.2.19. 김호중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확보를 위해 유인책을 주로 제시함으로써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탈피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이 상장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권수영, 노준화, 배길수(2004), “감사인 지정이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가? 감사인 순환과 감사인 유지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9권, 제4호, 191-218.

권순기(2001), “비외감대상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김광윤, 심충진(2011),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계, 세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와감사연구**, 제53호, 229-256.

김남희(2003), “금융위기 이후의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평가 - 회계실무가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김동관(2004), “비외감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0집, 305-331.

김정교, 유순미, 김현진(200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과 발생액의 질,” **회계저널**, 제18권, 제4호, 33-64.

백원선, 송인만, 전성일(2003), “회계정보 유용성의 추세변화와 원인분석,” **경영학연구**, 제32권, 제4호, 1187-1206.

백원선, 유재권(2010), “회계제도 개혁과 보수주의간의 관계,” **회계와감사연구**, 제52호, 197-223.

심상규(2007), “비상장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중소기업연구**, 제29권, 제4호, 215-236.

정대길, 송인만, 박연희(2009), “비감사서비스의 유형과 감사인의 독립성-현행 규정에 의한 금지, 조건부, 허용된 비감사서비스를 기준으로,” **회계학연구**, 제

34권, 제1호, 143-170.

Ashbaugh-Skaife, H., D. W. Collins, W. R. Kinney, Jr. and R. LaFond(2008), “The Effect of SOX Internal Control Deficiencies and Their Remediation on Accrual Quality,” *Accounting Review*, 83, 217-250.

Cohen, D., Dey A., and Lys. T(2008), “Real and Accrual Based Earnings Management in the Pre and Post Sarbanes Oxley Periods,” *Accounting Review*, 83, 757-787.

Desai, M. A. & Dharmapala, D(2006),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 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145-179.

Ogneva, M, K. R. Subramanyam and K. Raghunandan (2007), “Internal Control weakness and Cost of Equity: Evidence from SOX Section 404 Disclosures,” *Accounting Review*, 82, 1255-1297.

Zhang, I. X(2007),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4, 74-115.

## Implementation and Settlement of Accounting System Enhancement Plans for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yuk Shawn\* · Sang-hyuk Moon\*\* · Jae-gyung Jung\*\*\*

### Abstract

The Enron case raised an issue of the reliability of public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U.S and gave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the international economy as well as on the accounting industry. As a result, the U.S. Government enacted a Corporate Accounting Reform so called Sarbanes-Oxley Act. Korea also consistently introduced Accounting System Enhancement Plan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since 2003 and listed firms should adopt the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since 2011.

However, these regimes in providing high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are only focused on the listed firms which have many stake holders and mostly emphasize on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Therefore, to enhance accounting transparency of non-listed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new systems related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necessary to be suggested and supplemented.

This study suggests incentive systems to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not focused on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The incentive system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situation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receive external auditing service from external auditors, expenses associated with auditing should be deducted in corporate tax.

Second, we propose introduction of systems such as tax credit which reduce converting costs whe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voluntarily convert from Korean General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to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 Full-time Lecturer, Dept. of Accounting, Business School, Keimyung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Yeungnam University

\*\*\* Ph. D Student, Business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Third, we suggest introduction of tax incentive such as exemption of tax examination or corporation tax relief and installments whe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comply external auditing or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for a certain period.

Fourth, some kinds of regimes such as increasing of criminal penalties for fraud, systems advising surrender, whistle blower protection for employees are should be introduced and government w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and complement these regimes for the purpose of adopting that systems well.

In this study, we recommend the identified new incentive systems for enhancing accounting transparency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Besides, this study has contributions to give assistance to Accounting System Enhancement Plans are extended to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sides from listed firms.

Key Words: Accounting System Enhancement Plans, Accounting Transparency, Incentive System,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stle Blower